

고용노동부, 기업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

고용노동부(장관 이정식)는 5월 31일부터 4주간 대규모 사업체 중 유노조 사업장(510개소)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전임자 운영현황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다.

이번 조사는 사용자가 부당한 근로시간 면제 및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·개입하거나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둘러싼 갈등 사례*가 지속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투명한 노사관계와 건전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.

- * ▲ (근로시간면제 관련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 접수 건수) '19년 24→'20년 28→'21년 51→'22년 15건
- ▲ (지노위 근로시간면제 배분 차별시정 접수 건수) '19년 45→'20년 65→'21년 61→'22년 51건
- ▲ (사례) ①면제 한도를 초과해 별도수당 지급('23.4월 A사), ②면제 한도를 초과해 비면제자(2명)에 면제시간 부여 및 급여 지급('22.11월 B사)하여 '기소' 의견 송치

지난 2010년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이후 세 차례 표본조사를 한 바 있으나,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, 이번 조사는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주로부터 조사표를 통해 면제자의 급여 수준, 각종 수당 지급 여부, 운영비 지원현황 등 노사 간의 전반적 지원실태 등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.

이정식 장관은 “기업의 노조에 대한 불투명한 지원은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침해하고, 올바른 노사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”이라며, “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, 산업현장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근절 및 공정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.”라고 말했다.

붙임: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 개요 및 주요 내용

담당 부서	노동개혁정책관 노사관행개선과	책임자	과 장	조총현 (044-202-7692)
		담당자	사무관 사무관	김영덕 (044-202-7697) 김택수 (044-202-7670)

개요

구분	내용
기간	5.31 ~ 6월말(약 4주간)
대상	근로자 1,000인 이상 사업장 중 유노조 사업장 약 510개소
방법	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사용자 대상으로 조사표에 따라 실시

주요 내용(조사 항목)

구분	주요 내용
①사업장 노사 개요	사업장명, 사업장 소재지, 업종, 근로자 수, 조합원 수, 노동조합 수, 노조 조직형태 및 상급단체 등
②근로시간면제* 및 전임자	면제자(풀·파트타임)·무급노조임자 인원 및 시간, 유급 노조 활동시간에 사용된 면제시간 비중, 면제자 급여 수준 및 별도수당 지급 등
③노조운영비 지원	노조발전기금, 매점·자판기, 차량·유류비, 사무실 유지비, 대의원대화·워크숍 및 주요 행사(창립기념일·체육행사 등) 비용 지원, 주거 및 출장비 지원, 기타 지원 내역 등
④기타	근로시간면제제도 등과 관련하여 개선 필요 사항 등

*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활동(협의·교섭, 고충처리, 산업안전,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·관리업무 등)에 대해 유급처리를 인정받는 자